

## 민주당 일색 선거구도 변화의 바람 일으킬까

### 뉴스 초점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광주·전남 지방선거 영향?

지역 유권자에 긍정적 메시지  
양당 모두 '시너지 효과' 기대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키로 하면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선거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양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는 동의하지만, 정책연대나 지방선거 연대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주당 일색이었던 광주·전남 선거구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 서다.

18일 평화당과 정의당에 따르면 정의당은 지난 17일 개최한 전국위원회에서 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추진을 의결함에 따라 두 당의 관련 협상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두 당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3+3 원내 대표단 회의'를 열어 공동교섭단체를 대표할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배

분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호남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 간 국회에서의 협력 움직임을 두고 광주·전남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두 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도 양당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 지역민 사이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평화당 입장에서 국정의당 분당 이후 뒷받침인 광주·전남에서조차 흔들리고 있는 만큼 정의당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국정의당 못지않은 힘을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농어민과 노동자 등 서민층이 많은데다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은 광주·전남 특성상 평화당과 정의당 후보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정의당의 사회 진보적인 정책을 보면 우리 지역민의 정서와 부합하는 면이 많다"며 "두당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기반이 취약한 정의당도 양당 협력 기조를 통해 광주·전남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높은 정당 지지율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보들이 넘쳐나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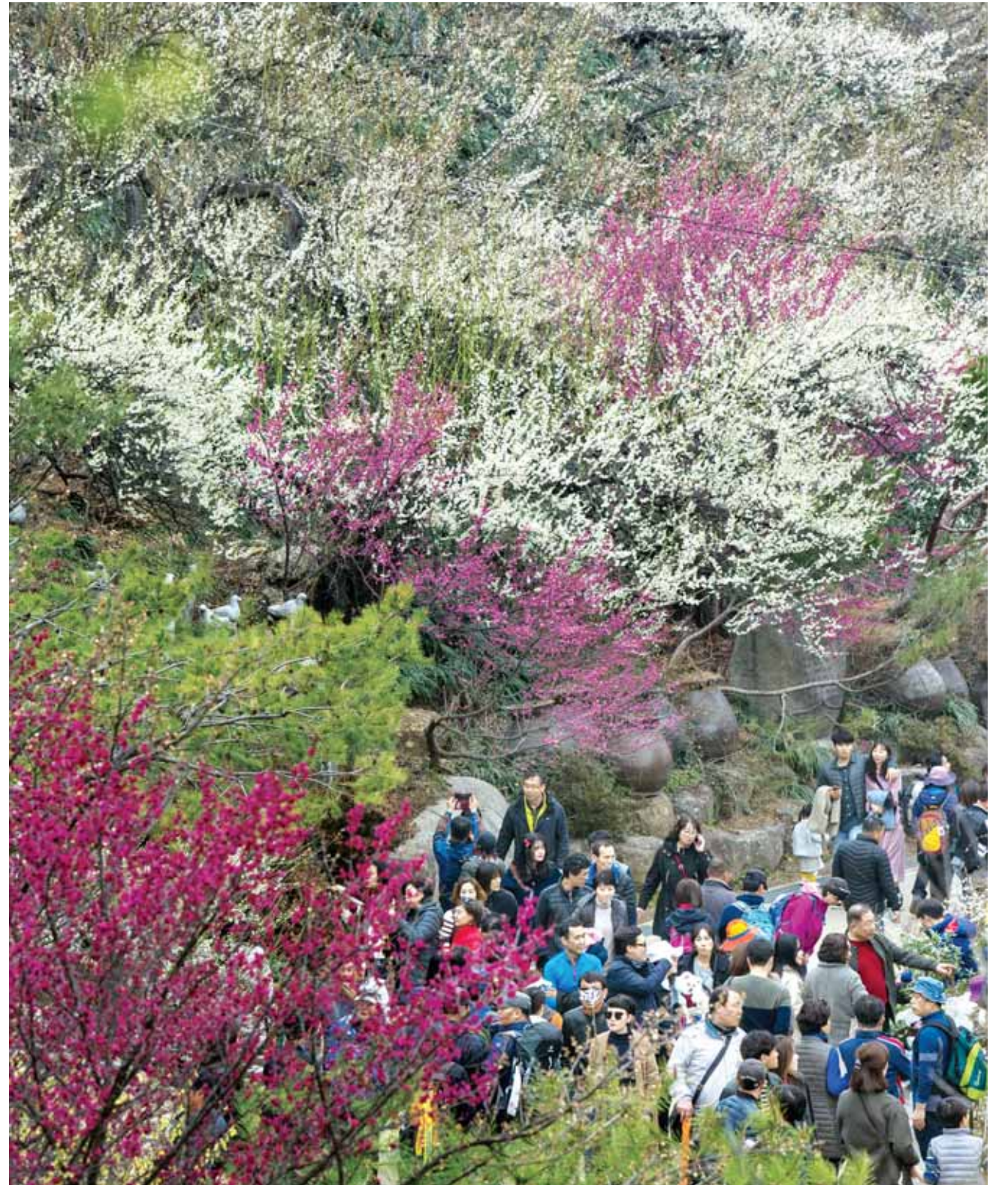
반해 후보 찾기도 힘든 평화당과 정의당으로서는 현재 민주당 일변도의 지방선거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에 더해 공동교섭단체 구성 시 참여하기로 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까지 합쳐 21석이 될 경우 '촛불 혁명'에 제동을 거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과의 대결에서 여당인 민주당에 큰 힘을 보탤 수 있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방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양당이 현재로서는 지방선거 연대에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평화당과 정의당 간 후보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여서 향후 지방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역정당 관계자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에 가려 평화당과 정의당의 존재감이 없어 보였지만, 양당의 국회 공동교섭단체 구성으로 지역민들도 서서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활짝 핀 광양 매화 "봄이 왔구나" 18일 광양매화축제가 열린 광양시 다압면 흥소리 청매실농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핀 매화를 둘러보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연차저 안남긴 물피 뺑소니 급증 ▶6면

KIA 3경기 7홈런 '불방망이' ▶20면

### 변호사 개업인사

저 송기식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퇴임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다, 장정희 전 장흥지원장과 함께 법무법인 감동으로를 설립하고, 변호사로 새 출발 하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

- 고졸 출생,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3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5기 수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가정지원 판사
- 광주고등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순천지원 부장판사
- 형평, 영광, 보성, 장성,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장
- 제20대 국회의원(국민의당 광주서구갑)
- 국회 교문위, 개헌특위, 사개특위 간사 및 위원

**법무법인 감동으로**  
대표변호사 송기식 · 장정희  
변호사 천나리 · 김수지 · 김현재 · 김성익

업무개시 : 2018. 3. 14.(수)  
개업장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7(지산동 714-17) 금강빌딩 201, 301호  
개업시간 : 2018. 3. 23.(금) 13:00~18:00(개소식 17:00)  
전화 : 062) 223-0500, 227-8500  
팩스 : 062) 226-0500, 227-8400

###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무기 연기

광주테크노파크 이사회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대하는 선임 원장 선출을 무기한 보류했다. 민선 6기 막바지 원장 선임을 둘러싼 광주시와 중소기업벤처부 간 마찰 <광주일보 3월 8일자 2면>이 자칫 지역기업, 미래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사장인 윤장현 광주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동의' 후 이사회를 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8일 "지난 16일 광주테크노파크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장 선출에 동의할 때까지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인 윤 시장은 "원장을 선출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원장만 식물원장이 되는 게 아니라 광주테크노파크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고 광주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대립과 갈등이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시장이 이사회 무기한 연기 카드를 꺼내 중소벤처기업부를 압박,

광주시와 정부부처 간 갈등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지방선거 이후로 이사회 연기, 추진 강행 시 후보 승인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광주테크노파크 임원추천위원회는 응모한 6명 중 서류 심사를 거쳐 4명으로 압축한 뒤 면접에서 2명을 선정,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점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현 원장이 탈락하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윤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모 전 광주시 부시장과 정도 조전대 교수 등이 추천되면서 보은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 갈 길 먼 개헌 ... 여야, 시기·내용 이견 첨예

### 문대통령, 선 발표 후 발의 검토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에 국회 차원의 개헌안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개헌 시기 및 개헌 내용 등 각종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실제 국회 개헌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관련기사 2면>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개헌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각 당의 개헌안 윤곽은 대체적으로 드러났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당장 개헌안을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 구성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테이블을 제안

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 GM 국정조사를 위한 3월 국회 의사일정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헌안 협상에도 임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개헌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더라도 정부 형태를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도 크다. 정부 형태에 대해 여권은 4년 연임제를 제안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또 야당들은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총리제에 연대 기류를 보이고 여당인 민주당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청와대는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9~

10월 중 국민투표가 가능한 방향으로 자체 로드맵을 마련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은 6월 개헌 국민투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국당이 개헌 의지를 확고히 드러낼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한국당 등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개헌 논의 전면 보이콧 등 국회 내 개헌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인 20일 또는 21일 개헌안을 '발표'하고 이후,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발의'하는 '선 발표, 후 발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 2018년 평창의 겨울을 세계가 기억할 것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2018 평창 대회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루어 낸 기적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  
추운 날씨에 묵묵히 땀 흘려 주신 자원봉사자들,  
안전을 책임져 주신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대원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해 주신 후원기업 및 협력업체,  
건강한 식사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힘쓰신 조리사와 환경미화원들,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강원도민과 평창, 강릉, 정선의 군민, 시민들,  
그리고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